

경영·경제

공공부조, 최저시급 인상(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 최저임금 보장, 일본 경제 보복, 일본 제품 불매운동, 빅데이터,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윤리경영, 코즈 마케팅, AI 마케팅, SNS 마케팅, 비트코인, 가상화폐 규제 정당한가, 블록체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국민연금 고갈 논란, 담뱃값 인상/인하, 종교인 과세,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펀드 전성시대, 사모펀드, 복지 확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빈곤은 누구의 탓인가, 우버 택시 도입 논란, 카카오 업체와 택시업계의 '카풀' 논쟁, 경유 값 인상, 휘발유 값 인상, 내국인 카지노 허용해야 하나, 법인세 내려야 하나,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 이대로 괜찮을까, 주류 온라인 판매 및 택배 금지 타당한가, 배기량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 바뀌어야하나, 도서정가제 필요한가, 정보의 비대칭성, 한일 양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공정무역 찬반 논쟁, 시장 vs 정부, GDP(국내 총생산) 3만 달러 시대 진입, 기회비용, 매물 비용,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대체재(버스 vs 지하철)/보완재(컴퓨터 vs 소프트웨어), 합리적 의사결정,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논란, **지하철 노년층 무임승차제 논란, 기본소득제 도입 논란(소득재분배/경제불평등 완화/경제 활성화/조세저항 완화 vs 막대한 자원/세금인상/노동의욕 저하/사회 생산성 저하)**, 지역화폐 지원 범위 논란,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 논란(보편주의/보편적 복지 vs 선별주의/선별적 복지, 내수 시장 활성화/경제 부양책 vs 기본 소득 포퓰리즘), 미·중 G2 무역전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가격 재상승

사회·문화

가짜 뉴스, 온라인·오프라인 의사소통방식의 장단점,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단점, 소셜 미디어의 영향, 1인 미디어 시대의 장단점,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 사이버 불링, 의사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댓글, 드루킹, 여론조사의 함정, 출구조사의 오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유승준 국민청원, 이공계 등 병역특례 폐지해야 하나, 아시안게임 병역면제, 낙태 금지는 위헌(여성의 자기 결정권 vs 생명존중/태아 생명권),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me too, 페미니즘, 워마드, 일베, 미러링, 젠더프리 교육, 사립유치원 비리, 유치원 아동 학대, 저출산·고령화, 이민정책 타당한가, 유럽 난민 수용,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간호사 '태움' 문화, 세월호 사건, 혼밥·혼술 혼자만의 시대, 1인 가구 증가의 원인과 해결방안, 반려동물 안락사, 반려동물 공공화장장 필요한가, 안락사/존엄사 찬반 논쟁, 사형제 찬반 논쟁, 로스쿨 귀족학교인가, 국민의 알 권리 어디까지인가(국민의 알 권리 vs 인권침해), U20 월드컵, 호날두 노쇼, 퀴어 축제(성적 소수자 축제), 두발 자율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고교상피제, 국정교과서 폐지, 일본의 역사왜곡, 학교폭력 증가, 신조어와 줄임말, 이모티콘, 야민정음, 급식제, 3.1운동 100주년, 먹방에 관심을 갖고 열광하는 이유는, SKY 캐슬 열풍과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논란, 유튜브 열풍, 웹툰 열풍, 한류의 원인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데이트 폭력,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생존 수영 확대, 서술형 평가 증가, 특목고 일반 학교로 전환 논란, 혁신학교 증가, 국제 바칼로레아(IB) 공교육 시범 도입, 문이과 통합교육 및 고교학점제 도입, 코딩교육, 조국 이슈, 고교 내신 절대평가, 미술품 대작(代作) 허용해야 하나, 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해야 하나, 야간자율학습 폐지해야 하나,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하나, 학제단축 필요한가, 대학 자율학기제 도입 옳은가, 특수학교 설립, 화장터 유치와 님비(NIMBY) 현상, 핼피(PIMFY) 현상,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국위 선양 vs 병역 의무/형평성·공정성)**, **악플금지법 도입 논란**,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학령인구 감소**, **국가인권위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 삭제하고 '체벌 금지' 신설 제안**, 강원도 고성 지역 산불, 언택트 시대의 도래, 의시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논란(잘못된 정책 추진/정부에 의해 강요된 선택 vs 집단이기주의/특혜·특례)

기술·과학·정보·환경

4차 산업혁명, 드론, 로봇세 부과 주장 타당하나, 노벨과학상 수상자, 미세먼지, 황사, 4대강 녹조(녹조 띠), 미세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라돈침대와 방사선, 중력파,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원전 폐기 공론화 위원회, 탈원전과 비핵화, 정부의 탈원자력 정책은 옳은 방향인가, 대체에너지, 폭염, 기상이변, 지구온난화(교토의정서), 포항 지진 공포 국내는 안전한가, 화산 폭발 국내는 안전한가, 지열 발전, 인공지능(AI), 인공지능 스피커/리모컨, 알파고와 이세돌,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자율주행자동차, 수소전기차,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카페 일회용컵 규제(머그컵 사용), 옥시 가슴기 살균제 사건, 살충제 달걀, 지속가능한 개발 가능한가, 축전지 개발(칼륨이온 전지, 마그네슘 이온 전지 등), 랜섬웨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서거 500주기), 스티븐 호킹(서거 1주기), GMO(유전자 변형 생물), 암 게놈 의학(분자 표적 치료제), 게놈 혁명, 유전자 가위, 유전자 조작 연구 규제, 인간 배아 연구, 과학자의 가치중립성, 유전자 교정과 윤리, 유전자 편집 아기(맞춤아기), 멘델레예프 주기율표 제정 150주년, 홍역의 역습, 질량 단위 재정의, HTTPS 차단 논란, 디지털 포렌식, 태양탐사선 파커, 중국의 우주굴기, 남극 빙하 연구, 보호무역주의(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은 IT기술), 소외지역에 고속 데이터 통신망 설치와 컴퓨터 교육, 클라우드, 중국 폐기물 수입 규제 확대, AI반도체 도입, 남북 ICT교류, 친환경 ICT, 스마트 디바이스 혁신, VOD 서비스, 구글에 지도반출 허용해야 하나, 쓰레기봉투 실명제 필요한가, 무인점포 증가, 무인자동주문기 '키오스크' 확산, ASMR(자율 감각 쾌락 반응), 백색소음(White noise),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 디지털 포렌식,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 조사(국민 알 권리/감염병 확산 방지 효과/선제대응을 vs 인권 침해/사생활 침해), 팬데믹(Pandemic), 독감백신 상온 노출, 2019년 WHO '게임 중독'을 새로운 질병으로 등록, 2019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틱톡(TikTok), 성범죄자알림e, 디지털교도소(국민 알 권리/성범죄 경종 vs 사적제재/인권침해/무고한 피해자)**

법·정치

사드 배치, 북한 핵·미사일 도발, 한국도 핵무장해야 하나,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전시작전권 환수, 조국 법무장관 임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간 결정, 한일 군사 갈등 심화, 한일 수산물 분쟁 심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처리안건), 동북공정(고구려, 발해), 서북공정(위구르), 서남공정(티베트), 위안부 배상 문제, 독도 영유권, PC(Political Correctness), 국회의원 정원 감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포퓰리즘(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음주 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윤창호법,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논란, 교수·학자들의 정치 참여 바람직하나(폴리페서), 만 19세 미만 소년 범죄 처벌 강화해야 하나, 흉악범 얼굴 공개해야 하나, 나이 계산 '만 나이'로 바뀌어야 하나, 복면금지법 찬반 논란, 노키즈존 필요한가, 24세 이하 술광고 금지 바람직한가, 전직 대법관 변호사 개업 막아야 하나(전관예우), 간통제 폐지 옳은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해야 하나, 흉악범 공소시효 연장 찬반 논쟁, 블랙리스트 vs 화이트리스트, 피의자 공개 소환 전면 폐지(국민의 알 권리 vs 인권 침해), **미국 대선 전까지 '리트윗' 제한 한시적 강화, 홍콩 민주화 시위, 베를린, 소녀상 전시 중단 논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